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진현



최근 모스크바에 주재하는 한국 상사원 C씨는 불쇼이 극장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극장 안에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러시아 중년 여성이 월 300달러를 받는 자신의 가정부 옮겼기 때문이다. 늘 허름한 차림이었던 가정부가 이날 만큼은 화사하게 차려 입어 처음엔 얼른 알아보지 못했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던 불쇼이 발레단의 화려한 공연을 보고 나면 결코 뺨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삶의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는 그녀의 얘기는 충격적(?)이었다. 평소엔 가정부로, 주말엔 불쇼이 발레단의 공연을 감상하는 관객으로 '변신'하는 율가의 '두 얼굴'은 C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관객 붐비는 불쇼이 극장

모스크바 사람들의 겨울은 발레관람으로부터 시작된다. 겨울이 빨리 찾아오고 밤이 긴 지리적 여건상 '모스크바치(모스크바시민)'들은 밤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공연장을 찾아가는 것이 일상화됐다. 말

하자면 이들에게 있어 공연관람은, 일종의 겨울나기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여름 휴가철을 빼면 모스크바는 늘 문화관광들로 붐빈다. 연극과 발레, 오페라를 공연하는 93개의 크고 작은

삶이 그대를 각박하게 할지라도

극장에서 매년 수백여 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도심에 위치한 불쇼이 극장은 성장(盛壯)한 노부부에서부터 발랄한 처림의 20대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관객들로 넘쳐난다. 객석의 광경잡한 중년 여성들은 발레 '지젤'의 즐거리를 줄줄 외울 정도다. 추운 겨울동안 발레, 뮤지컬, 전시장 등을 찾아 다니다 보면 따뜻한 봄을 맞게 되는 곳이 바로 모스크바다. 이들에게 있어 문화향유는 특별한 의식이 아닌, 말 그대로 '삶의 방식'(the way of life)이다. 모스크바 시민들이 '뉴요커(New Yorker)'나 '런던너(Londoner·런던

시민)'들에 결코 기죽지 않고 '문화시민'임을 자부하는 힘도 바로 이런 저변에서 나온다.

이 같은 러시아 사람들의 예술사랑은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다. 흔히 문화생활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한가하게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둘러 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넘쳐났을 때와 비교하면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둘러 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넘쳐났을 때와 비교하면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둘러 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다.

약하다.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는 곧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문화수도를 지칭하는 광주시민들의 일상은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그리 '문화적'이지 않다.

지난해 한국 레저산업연구소가 지역별 1인당 문화오락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민들의 1인당 오락문화비는 65만 2천404원으로,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6위에 그쳤다. 문화오락비는 전시 및 공연 관람, 신문, 서적구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한 지역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척도 가운데 하나다.

순수예술행사인 전시와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광주시립미술관의 경우 1일 평균 관람객은 50명(2005년 기준) 안팎이고 주말은 200여명 내외다. 공연인구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연계에서 추산하는 이 지역의 문화예호가는 약 1만여 명, 광주 인구가 약 140만 명임을 감안하면 1%도 안되는 관객들이 문화수도 광주의 체면을 세우고 있는 격이다.

문화송년회로 한해 마감

이같은 척박한 문화저변은 서울, 부산, 광주 등 다른 도시들보다 하얗게 '왜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수도인가'라며 탄지를 절게 하는 발미가 되고 있다.

물론 광주의 빈약한 문화토양이 비단 시민들의 낮은 문화마인드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용기와 같은 개개인들의 문화향유가 밀려올 때 예술수도 우뚝 선 '모스크바의 신화'는 '문화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한해의 끄트머리인 12월, 사랑하는 사람들과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찾아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보자. 분명 예술적 감동 이외에 잊고 살았던 일상의 여유를 되찾는 답도 얻게 될 것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시설

AI 긴장 고조...총력 기울여 확산 막아야

전북 익산에 이어 김제에서도 인체 감염 우려가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4개월 동안 전국으로 확산돼 1천5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야기했던 3년 전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지금으로서는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으로 AI가 다른 곳으로 퍼지지는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더욱이 광주·전남지역으로서는 전북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곡성의 한 농장이 AI가 발생한 김제의 메추리 농장에서 새끼 메추리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바이러스 차단에 한 치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김제 발병 원인을 놓고 겨울철 새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익산의 방역망이 뚫린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제 메추리 농장이 지난달 19일 처음 AI가 발생한 익산 소재 양계장에 근접해 있고, AI가 발생한 3곳이 모두 23번(김진~천안) 국도변에 있다는 점

에서 방역망이 뚫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제 농장에서 메추리 폐사 신고가 당국에 접수된 것은 10일로, 최초 폐사 시점으로부터 4일이나 지난 후였다. AI로 최종 판명되기까지 5일 동안이나 초기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방역이 시작될 즈음에는 이미 외부로 전파됐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AI 확산 원인이 철새이든, 허술한 방역망이든 간에 더 이상의 확산만큼은 막아야 한다. 지난 2003년처럼 전국으로 퍼진다면 우리나라는 동남아와 같이 'AI 문제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 신인도 하락과 함께 국내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AI 차단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자체 및 축산농가는 물론 국민 모두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사 90%가 '부정적' 평가한 교원단체들

교사들이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직 교사 모임인 (사) 좋은교사운동은 12일 회원교사 204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교원단체들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교사와 학부모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이 적어 신뢰도에 한계가 있지만 전교조 소속 42명, 교총 소속 27명이 포함된 현직 교사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정적 평가는 전교조 90%, 교총 92%에 달했다. 전교조는 학교의 개혁과제를 제시하기 보단 상식을 벗어난 시작으로 이념적·정치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는데다 교사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상충하면서 집단의 '이익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민주화 이후 기록권이 흔들리게 되자 '교장 공모제' 등과 관련해 지나치게 투쟁적인 노선을 선택하는 등 기록

권 지키기에 몰두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출범한 보수적 성향의 뉴라이프교사연합이나 자유주의교원연합에 대해서도 88%가 교사의 본분과는 무관한 정치 이슈에 매달리고 있어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교원단체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이념 및 정치투쟁에 몰두하고 집단이기주의나 기록권 지키기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오죽하면 교원단체가 교육의 걸림돌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을까.

교원단체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사의 본분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전교조의 출범 취지도 '참교육'이었다. 교육현장에는 개혁해야 할 과제와 산적해 있다. 교사들까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방식을 고집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교원단체들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핀칼럼

임명재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광주 문화수도사업'이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설 도청일대의 토지보상을 마무리 하고, 논란이 있었지만 건축설계안도 확정하면서 차분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광주시와 문화부가 보여주고 있는 청사진만으로 이름에 걸맞게 광주가 문화수도로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자꾸 드는 것이 안타깝다.

먼저 문화수도라는 것의 명확한 정의와 목표가 아직도 안개속인 것 같다. 일부에서는 무슨 문화수도냐는 것과 함께 문화수도라는 광주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수도는 다른 어떤 도시도 쉽게 갖

부채질하고, 거기에도 연출과 압력이 작용하여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는 것은 참된 예술인들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그들의 희망을 파괴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문화수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 '아시아문화의 전당'이나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정도는 손쉽게 계획할 수 있고,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누구라도, 어떤 도시라도 손쉽게 이루어 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훌륭한 무대에 최고의 예술인들이 올랐는데 객석은 텅 비어 있다면? 또 다시 공짜관광이나 중고생들의 체험 학습 동원으로 채워야 한다면 그건 결코 문화수도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광주 문화수도 사업에서 간과되는 것들

지 못할 굴뚝 없는 거대 산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거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시장과 문화부의 책임자들의 의지와 치밀함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다.

문화수도 사업이 아시아 문화전당을 짓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그렇다면 광주는 결코 문화수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예산만 축내는 광주의 애물단지 되고 말 것이다.

또한 문화수도에 따른 특별법과 이에 따른 예산이 광주에서 창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 보다는 단체간의 나눠먹기로 남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전국에서 문화관련 예산이 최하위였던 척박한 환경에서도, 전통적인 문화 자존심으로 버텨왔던 이들에게 치밀하지 못한 예산 집행은 문화 환경을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단체간의 반목만

그렇다. 문화수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소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다양한 계층의 문화 매니아들이 표를 구하기 위해 밤을 새워 줄을 서는 문화소비자, 광주시민들이 살게 된다면 광주 문화수도가 완성될 것이다. 문화수도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문화소비자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 주부들과 시민들에게 끝보다 문화예술을 접하고 즐기는 것이 훨씬 멋진 취미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송송환씨의 '난타'가 10여년의 공연기간동안 무려 천여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이번엔 B-boy라는 또 다른 작품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 한다. 문화는 분명 한 산업이고 광주가 도전해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목표이다. 책임 있는 자들의 치밀한 계획이 광주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사)문화시상시민연대대표·2005년 12월 수성자>

은핀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핀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인터넷 '유료 시험 족보' 성업... 점수 만능주의 씩씩

얼마전 초등학교 5학년인 자녀가 인터넷 회원 가입에 필요하며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졸라 들여다보니 족보 사이트 가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일부 과목의 경우 해당 교수가 지난해 출제된 시험문제를 판매들이 족보라며 만들어줘 본 기억은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기술문제 학습자료라며 돈을 받고 파는 것을 보니 너무한단 싶었다.

사이트에는 '초등시험 족보 오픈, 전과목 우등생 지름길, 단원별 핵심 족보'라며 학년별로 각종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한달에 들어가는 비용은 1만8천원 정도, 1년에 8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아무리 돈벌이도 좋지만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 무조건 점수 따기만을 가르쳐서는 안된다. ▲이슬·목포시 영해동

기고

류재근



국가 재정정책을 논할 때 '성장(Growth)'과 '분배(Distribution)'의 문제를 흔히 '피자(Pizza) 나누어 먹기'에 비유하곤 한다.

한 판의 피자를 두고 열명의 사람이 적게 나눠 먹고 항상 배고픔에 허덕일 것인가, 아니면 힘을 합쳐 더 큰 피자를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큰 피자를 나눔에 있어 과연 누가 얼마만큼의 피자를 먹느냐, 즉 분배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각자의 지혜를 모아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 낸 피자를 나누고, 원칙을 정하고 난 후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일해서 점점 더 큰 피자를 만들어 더욱 풍요롭게 지낼 수 있었다

장애인 200만명 시대를 살아가며

고 한다. 장애인 고용정책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중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하는가에 따라 법적 개입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차별금지법'을 통한 접근, 사회적 형평성의 관점에서는 '의무고용제'를 통한 접근을 통해 각각의 제도가 지닌 고유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면서 현행 장애인 고용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대기업의 기업경영 패러다임이 사회적 책임과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윤리경영, 이미지경영, 책임경영, 다양성 경영 등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기업의 장애인고용은 이제 더 이상 호혜적 자선이 아니라 기업과 장애인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상생(相生) 전략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구체적 실천이며, 이는 결국 기업의 이미지가 상승, 소비자 신뢰 구축,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로 귀결될 것이다.

장애 인력에 대한 투자는 결국 계층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다양성 경영방식을 도입하게 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이 상호배려하며 협력하는 능률적인 기업문화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2000년말 95만명에 불과했던 등록장애인 인구가 장애법주의 확대로 인해 2005년말 177만명, 2006년 상반기 188만명을 이미 넘어섰고, 2007년도에는 바야흐로 200만명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장애인 200만명 시대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2%의무고용제'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고민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부터라도 기업경영의 획기적인 전략인 '다양성 경영' 기법의 과감한 도입을 통해 한층 세련된 사회공헌 경영을 펼쳐 주시기를 모든 기업인 CEO님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싶다.

정해년(丁亥年)인 2007년은 6000년에 찾아오는 상서로운 황금돼지해라고 한다. 역학적으로 근거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2007년에는 이 상서로운 기운이 장애인고용부문에 골고루 뿜쳐 장애인고용의 황금알을 낳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영험한 상념에 젖어 본다.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 재활상담팀장>

세제혜택, 정치 후원금은 줄이고 기부금은 늘려야

얼마전 시내에서 정치 후원금에 관한 홍보물을 접했다. 정치 후원금의 1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또 소득세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세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실제 공제액은 11만원이라고 한다. 후원금보다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귀가 솔깃한 얘기다. 하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의 사용 내역에 관한 많은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더구나 불우이웃들이 성금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금에 소득공제의 혜택만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정치 후원금에 대한 특혜가 너무 과도하다.

오히려 정치 후원금보다는 기부금에 대해서 이러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불우이웃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국민의 혈세를 가장 알맞은 곳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정치 후원금의 세제혜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듯이 기부금에 대한 혜택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하루빨리 정부기관이 정치 후원금이 없어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의원보다 가난으로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이준성·광주시 동구 호남동

無等鼓

노벨상은 다이나마이트 발명자이자 사업가인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이 1895년 전 재산을 기증하며 한 유언에 따라 설립한 기금으로 6개 분야 인류 최대 공헌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물리학, 화학, 생리학·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등 6개 부문에서 '전년 인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도록 명시한 유언에 따라 노

벨은 사망 5주기인 1901년 12월 10일부터 상을 주기 시작했다. 물론 경제학상은 1968년 스웨덴 리크 스타르크에 의해 추가 제정, 1969년부터 수여됐다. 노벨재단은 기금의 법적 소유자이자 실무 담당기관으로 상을 주는 4개 기관의 공동집행기관이다. 그러나 재단은 후보 심사나 수상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수상자 선정은 시상이 있기 전 해 초가을에 시작돼 이듬해 11월 15일 이전 최종 결정된다. 지금까지 전 세계 31개국 690명이 노벨상을 수상했다. 미국이 270명으로 가장 많고 영국 100명, 독일 77명 등의 순

'노벨 환경상'



이 환경장관이 환경보호 공적을 기리기 위해 노벨환경상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눈길을 끈다. 현재 보수 과 국회의원은 그는 노벨을 추모하는 상으로 경제학상처럼 환경상을 창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그러나 환경상 신설은 이미 검토된 안으로 스웨덴 노벨재단이 거부한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이전 음악상 창설 제안도 거부된 바 있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이번에는 노벨재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circulation data.